

특별강연

# 국민보건사업의 현재와 전망

— 신 현 환 —

<보건사회부장관>



재미한인간호협회 초청 합동 학술대회의 모임을 이루어 주신 대한간호협회와 재미한인간호협회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오늘 이 기회에 제가 우리나라의 보건사회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우리나라의 보건정책의 현황과 전망을 말씀드리게 될것은 제자신으로 해서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1, 2, 3차 경제개발 계획이 성공리에 추진됨에 따라 사회개발이 중요정책으로 결정되었고 사회개발 분야 중에 보건정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기에 여러분의 이러한 모임은 특별한 뜻 깊은 모임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민족이 수천년을 통해서 받은 고난은 세계 어느 나라 중에서도 가장 심한 고난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고난은 외적인 내적인 억압의 고난, 빈곤의 고난, 그리고 질병의 고난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이겨나오면서도 미국사회에 우리나라의 의료진중 간호원이 6,000여명, 의사가 3,000여명이 나가 있다고 하는것은 자랑스러우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슬픈 현상입니다. 한국의 간호원 비율은 선진국의 4분의 1, 일본에 비해 2.5분의 1 정도 뿐입니다. 우리국민의 보건을 돌볼 인구가 부족하면서 무슨 여유가 있어서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하느냐의 문

제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우방국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장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손을 끊고 별도의 길을 걸을 의사는 전연 없으며, 그럴 수도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대를 내려오는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고 정신속에 박혀있는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때 재미한인간호협회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서로의 장래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일이나 하는 것을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는 미국 우방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의 힘을 양성하고 자주적으로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서 손을 잡을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지 자기 힘의 양성없이 일방적인 의존에 의해서 민족적인 일이 해결될 수 없으므로 우리는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되었고 국방에 있어서 자립해야 되었고 그보다 더 정신면에 있어서 자립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립을 위한 몸부림을 우리 3천6백만 국민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업시찰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공업, 농업, 상업 분야에서 사회생활 부문에서 날이 다르고 달이 다르고 해가 다르게 달라져 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3천6백만의 몸부림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목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

한 그 힘의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전국민으로 하여금 뭉쳐 나가도록 하느냐 이것이 유신체제입니다.

미국 보건사회 관계부처는 금년에 미국하원에 제출한 예산이 1,842억 달러입니다. 그중 교육부분의 예산을 빼고 미국 국민 1인당의 보건비를 계산하면 1인당 1,000달러의 예산입니다. 우리나라는 금년말까지 가면 우리나라 국민전체를 평균한 1인당 국민소득 전체가 1천달러가 되겠다. 하는 것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국민보건은 어떻게 이뤄가고 있으며 전망은 어떠한가.

지금 3천6백만 한국사람들은 자신에 차 있고 그 자신을 살리기 위해 밤잠 안자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국민도 머지않아 그렇게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은 어느 부문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료혜택도 이제 시작입니다. 보건정책의 기본은 모든 국민에게 값싸고 양질의 보건대책을 어떻게 해서 골고루 주느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들면 보건요원과 시설면에 있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구는 농촌과 도시가 현재 반반이 되어 있으나 의료시설과 요원은 도시가 약 84%, 농촌이 약 16%입니다. 이만큼 균형이 안되어 있습니다. 보건수단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약 2할이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8할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수단은 약 1할의 부분을 가지고 해야되고 약 8할의 부분은 민간의 자유경영주의에 맡겨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에게 골고루 보건의료를 베풀기 위해서는 공공부분과 개인부분의 균형, 도시와 농촌의 의료시설 균형이 중요한 시책의 하나입니다.

취약지구와 공업단지에 보건의료시설을 81년까지는 종합병원을 25개 설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정부계획에 병행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 아산재단, 대우재단등에서도 종합병원을 지방에

세웠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전북에 25개 침상의 종합병원이 준공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못한 취약지구인 벽지나도에도 병원건설 계획을 연차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9개를 건설할 계획이며, 3개는 벌써 완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을 만들었다고 해서 국민들이 전부다 혜택을 받을 입장이 있느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도면의 계획으로 작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의료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이 의료보호제도는 우리나라 국민중 소득이 가장 낮은 6%에 해당되는 210만명 정도에 대해서 정부의 예산으로서 의료를 책임져 주어야 한다는 원칙에 의한 제도입니다. 그 대상자를 두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아주 가난한 사람은 통원치료와 입원치료 모두를 정부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중 좁은 사람에 대해서는 30%를 정부 부담, 70%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1년~2년 거치후 연차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상환치 못할 때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정 면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는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의료보험제도는 고용주가 50%, 자기가 50% 부담하여 의료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약 320만명이 혜택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무원과 교원 그 가족에 대해서 보험제도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명년부터는 약 1천만명의 국민이 의료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5차 5개년 계획말에는 완전한 의료보장제도가 확립됩니다. 우리의 성장은 이것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성장, 복지 어느 부문이 더 중요하느냐 논란의 대상이 되지만 복지가 성장에 너무 뒤떨어지면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성장자체가 저해됩니다. 성장에 맞지않는 과잉복지를 추구하면 성장은 깨지므로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이루면서 사회조직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협력해야 될 문제이며 의료기관과 의료요원의 자발적인 의료봉사가 뒤따라야 하겠습니까.